

이낙연 싱크탱크 채비... 與 잠룡들 본격 세불리기

'연대와 공생' 경제·사회·정치 등 6개 분과 운영 내년 3월 정식 출범 이재명 지사, 도정 집중·경기연구원과 정책 연구... 대선 파급력 촉각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의원 50여 명이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띄우면서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달 중순 출범하는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연구원'(가칭)을 놓고 당 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친문 진영의 중심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3일 통화에서 "집권 말기 권력 누수를 막고 당내 구심점을 마련하려는 취지 같다"며 "향후 당권, 대권과 관련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당내 인사는 "친문 그룹이 추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 일종의 그릇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싱크탱크 참여 인사들은 민주주의4.0연구원이 '정책 플랫폼'이라며 세력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친문들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싱크탱크 행보가 정책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세와 연결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2심 판결(6일) 결과에 따라 김 지사를 지원하는 성격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친문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 측도 이런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

는 "여러 정책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당의 정책역량이 풍부해지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자체 싱크탱크도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 전남지사·국무총리 시절 공부 모임을 확대 재편한 싱크탱크준비모임 '연대와 공생'은 경제·사회·정치·국민건강·과학기술·외교안보 등 6개 분과로 나뉜 개방형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고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은열·신경민 전 의원 등도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외곽 지지 모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출범한 행복국가포럼은 진선미 의원의 오빠인 진봉현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 세대, 직능별 공동대표 12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이 지사 측도 친문 중심의 싱크탱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다른 분들이 싱크탱크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눈 돌릴 이유는 없다"며 "도정에만 집중하며 성과를 내면 그것을 통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대선을 염두에 둔 개인 조직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대신,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주요 정책 의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사의'... 문 대통령 '반려'

"대주주 기준 갈등에 책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논란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대주주 기준은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 국면이라는 점,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기재부, 재정당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그동안 '대주주 3억' '재정준칙 도입' 등의 문제로 여권과 자주 충돌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사실상 항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당장, 여권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힘, 재보선 야권 연대하나

후보 선출 완전 국민경선 검토...진입장벽 낮아 외부인사 경선 수월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사실상 완전 국민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3일, 이번 재보선 경선의 시민 참여 비율을 100%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본격선에 앞선 예비경선은 시민과 당원의 반영 비율을 대략 80% 대 20%로 할 방침이다.

이 역시 현재의 당헌·당규(일반 유권자 50%, 당원 50%)와 비교해 시민 참여 비율을 대폭 높인 방

식이다. 이처럼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 여론의 비중을 확 줄이려는 것은 당 밖에서 출마를 저울질 중인 주자들에게 보내는 '영입 신호'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원 참여를 제한하면 당내 기반이 없는 인사들 로선 경선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만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등 외부 인사 영입이 수월해진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당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라며 "선거 연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준비

이달 중순 경선 선관위 가동...박영선·우상호·박재호 등 물망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보인다.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에 대해 당원 86.64%의 찬성을 받아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 의결이 끝나자마자 선거기획단을 꾸려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돼 공천 준비를 시작한다. 당 관계자는 "11월 중순에는 기획단이 활동을 시

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궐선거인 만큼 (기획단과 검증위·선관위가) 거의 동시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선은 당헌·당규에 정해진 틀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민주당은 검증위를 소규모로 꾸리고, 당의 다른 기구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은 당내에 중량감 있는 후보군이 다수 거론되는 만큼 '외부 수혈' 보다는 경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꼽힌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 등이 꼽힌다. 부산 지역구 현역인 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입김이 오르내린다.

민주당은 '무공천 원칙'을 저버렸다는 야권 등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면서 선거 영향을 차단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어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까"라며 "역대 가장 혹독한 도덕성 검증이 진행될 것"이라며 여성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송갑석,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은 3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익

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출원 및 권리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거절 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정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대상 확대 ▲분할출원 우선권 자동인정제도 도입 및 일부 분할출원제도 도입 등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물건

-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41-1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287,858,000원(45%) 유찰 3회
- 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38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 : 2408㎡(728.4평)
감정가 : 1,208,461,600원
최저가 : 1,208,461,600원(100%) 신건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